

# 병원건축 '안전성' '효율성' 강화 추세

- 환자에게 심리적 만족 주는 공간돼야
- 감염 위험정도 따라 부서 분리 배치
- 재난 발생 시 수평피난 원활하게 설계
- 소독약품 잘 견딜 수 있는 마감재 사용

명에 따라 로봇 활용, 인공지능화 등 병원환경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30년 후 병원의 모습은 지금과 매우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환경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한수하 순천향대 간호학과 교수는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부서 배치 계획 시부터 병원의 각 부서를 감염 위험정도에 따라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감염으로부터 보호돼야 할 영역, 격리환자 입원병동과 의료폐기물 처리구역 등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영역, 행정사무실 등 감염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영역으로 구분해 서로 분리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염된 동선을 가능한 짧게 계획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작업공간이 좁을수록 불필요한 접촉이 늘어나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병원의 모든 마감 재료는 쉽게 정소할 수 있고 소독약품에 잘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수하 교수는 "리모델링 등 병원 건물 내부에서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염관리 위험 사전(ICRA) 후 공사를 시작하고, 감염관리를 위해 환자 진료공간과 근접한 공사현장의 음압상태를 유지하고 방호벽에 틈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건축계획도 강조했다. 허은영 희림종합간호사사무소 웰스케어설계본부장은 "병원에는 환자, 장애인, 노인, 소아 등 거동취약 계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면서 "24시간 운영으로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재난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수평피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공간을 계획해야 한다"면서 "피난계단, 방화벽 등 설비에 적절한 투자를 해야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koreanurse.or.kr

# 치매극복의 날 맞아 간호사 포상

대통령 표창 2명 - 국무총리 표창 1명 - 복지부장관 표창 7명

제11회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을 맞아 우리사회 치매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간호사들이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는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1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7명이다. 시상식은 9월 20일 열린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됐다.

◇**대통령 표창**= 박경옥 서울시 건강증진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치매담당 부서장으로서 '치매국가책임제'에 부응하고, 치매안심센터사업 정착을 위해 적극 기여해왔다. 보건소, 병원 등 치매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매예방, 조기발견, 환자의 치료관리 등에 헌신했다. 보건간호사회 서울지회장을 맡고 있다.

김민선 경북 상주시보건소 지방간호주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관내 치매환자 전수조사를 통한 치매통합관리 데이터 구축,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를 통한 치매환자 인지훈련 프로그램 제공, 주민참여형 '치매보듬마을' 만들기 등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치매안심센터 확충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적극 추진했다.

◇**국무총리 표창**= 문옥영 경기 부천시보건소 지방간호사사무관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행정복지센터 내 '100세 건강실', 소외계층 경증 치매환자 활동지원을 위한 '가족사랑 이음센터' 등을 운영하는 데 힘쓰는 등 수요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치매관리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해왔다. 부천시에서 치매안심센터 3곳(부천·소사·오정)을 확충하는 데 기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간호사는 다음과 같다.

김유정 중앙치매센터 부장, 김순경 인천광역시치매센터 사무국장, 김순연 경북광역시치매센터 사무국장, 정영주 중앙치매센터 치매상담콜센터 수퍼바이저, 서관희 부평구치매안심돌봄터 부평행복의 집 팀장, 김연미 강원도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 허인원 선학요양원 간호부장이 수상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종합계획 수립

## 중앙-권역-지역센터 안전망 확충

## 심폐소생술 등 초기 대응교육 확대

심뇌혈관질환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전주기적 관점의 종합 계획이 수립됐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에서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심뇌혈관질환을 '예방-치료-관리'한다는 전주기적 관점에서 수립됐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비와 사회경제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종합계획은 △대국민 인식 개선과 건강생활 실천 △고위험군 및 선별질환 관리 강화 △지역사회의 응급대응 및 치료 역량 강화 △환자 지속관리체계 구축 △관리 기반과 조사·연구 개발 강화 등 5개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수칙 및 증상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국민 인지도 개선에 나선다. 학교·직장 교육과 연계해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생활 속 관리가 필요한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심폐소생술 등 초기 대응방법 교육을 확대한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종합포털사이트를 운영한다.

또한 고혈압 등 심혈관계질환의 고위험군 선별기준과 선별도구·관리지침을 개발해 확산시킨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등록·상담·교육 등 일상생활 속 생활습관 개선과 자가관리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안전망을 '중앙-권역-일차(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연계되도록 안전망을 확충해 지역적 편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일차(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입원환자에 대한 조기재활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급성기 치료 후 퇴원한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 제공체계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국가단위 통계를 산출하고, 심뇌혈관질환분야 연구개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수요평가,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윤대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환자의 급성기 치료 이후 사후관리까지 범위를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중앙-권역-지역센터 안전망, 환자 지속 관리방안, 통계구축 등 새로운 과제에 구체적인 모델을 조속히 마련·시행해 종합계획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 복지부-행안부-국토부 '커뮤니티케어 업무협약'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데 협력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공모사업 간 연계 △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문간호 등 보건복지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의

돌봄, 행안부의 자치, 국토부의 재정을 연계해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기반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및 의료기관, 주민자치회 등 각 소관 분야의 민간부문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서 2곳 내외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각 부처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케어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0월 중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안부·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중심의 케어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 치매노인 위한 공공후견제도 도입

65세 이상 저소득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9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 등을 규정했다.

치매노인의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 제9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상의 후견제도와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인뿐 아니라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후견인 등이 치매공공후견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치매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충현 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지자체의 후견심판 청구 등 법률 지원을 위해 중앙치매센터에 변호사 인력을 갖추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후견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한 운영모델을 제시해 올해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베이비부머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노인의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치매노인 지원과 노인일자리라는 두 가지 사업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혜진 기자 hjjo@

# 2019년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 시리즈 판매!

-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집 개정판 출시 -



## 대한간호협회 문제집의 특징

-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최신 출제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문제
- 2 현직 교수, 병원 및 지역사회 전문가가 개발·검토한 국가시험 예상문제
- 3 신규 간호사에게 필요한 이론 & 임상사례별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초점
- 4 언제 어디서나 문제풀이 가능(PC·휴대폰)



"문제집 온라인서비스 무료 제공"

문제풀이, 오답 체크, 중요 문항 관리 및 현황 분석 기능 활용으로 반복 학습 가능

문제집 세트 구매시

10% DOWN!

- 북마크 사은품 증정 -



RNbook.or.kr은 대한간호협회 출판사가 운영하는 간호학 전문 도서몰입니다.  
문의 : 대한간호협회 출판사 02-2260-2553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문의 전화 1522-1755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림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 서울040638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